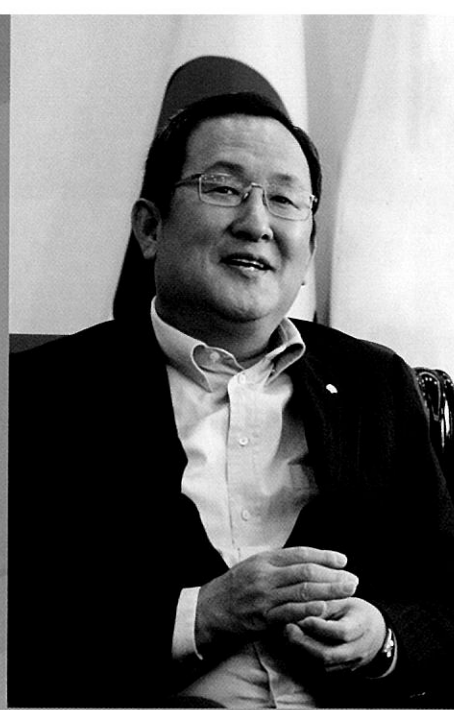


「총장칼럼」

사립대학 입장에서 본 반값등록금

유병진 | 명지대학교 총장



2007년 대선공약의 하나로 대학등록금을 반값으로 내리는 공약을 제시하면서 정치권으로부터 반값등록금 문제가 제기되었다. 반값등록금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막대한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사회적으로 그 비용을 감당할 만한 인식이 폭넓게 조성되어야 한다. 아울러 관련 당사자들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우리 사회 모두의 노력에는 미흡한 감이 없지 않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대학진학률은 80%에 이른다. 이는 우리나라 대다수의 가구가 반값등록금 문제에 대해 당사자의 입장에 놓인다는 말이며, 그만큼 사회적으로 뜨거운 관심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학등록금을 훨씬 상회하는 초·중·고 시기의 사교육비 지출이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등록금까지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 맞물리다 보니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것이 사실이다. 그만큼 사회 구조적인 차원에서 차근차근 접근해야 할 대학등록금 문제와 관련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모든 책임을 대학에만 전가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접근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논의를 진행하기 전에 우선 '반값등록금'이라는 용어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반값등록금이란 용어는 다른 문제는 다 제쳐두고 대학이 무조건 등록금을 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인식만 학생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 때문에 사회 전체적인 관심과 노력 아래 대학등록금의 부담을 절반 가까이 낮추자는 쪽으로 문제의 초점을 옮겨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대학의 등록금 수준이 높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의 경우 전체 대학 중 사립대학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정도인데 비하여 미국의 경우는 그 비율이 30% 정도이고 유럽의 경우는 10~20%대이다. 따라서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국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많이 받는 국·공립대학이 다수를 차지하므로 사립대학이 다수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와 비교한다면 등록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만약 우리나라도 사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국·공립대학 지원 수준으로 높아진다면, 평균 등록금 수치는 지금보다 훨씬 낮아질 것이다. 이는 결국 사립대학의 등록금 수준을 내리기 위해서는 사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걸 말해준다.

우리나라의 사립대학 비중이 다른 선진국에 비교하여 높은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태생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 같다. 우리의 경우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국가 주도로 대학을 설립할 여력이 없었던 탓에 자연히 대학 설립은 초창기 외국인 선교사와 민족지도자 그리고 뜻있는 독지가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독자적인 설립정신과 건학이념을 구현하고자 사재를 출연하여 대학을 설립하였다. 사립대학의 창립은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는 동안에도 계속되었다. 고등교육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국가의 손길이 미약할 때 사립대학이 그 수요를 감당하면서 국·공립대학의 빈자리를 채워나갔던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 대학 중 사립대학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 기인한다.

이렇게 설립 배경에서부터 국가의 지원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립대학들은 자연스럽게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학생들의 등록금에 주로 의존하여 대학을 운영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대다수 사학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미래 우리 사회의 건전하고 실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며 국가 경쟁력에 직결되는 대학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대학의 경쟁력은 곧 그 나라의 경쟁력이고 대학에 대한 투자는 국가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대학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하여 인재 양성과 국가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절실하게 공유할 필요가 있다. 대학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당장에 지출되는 운영비 외에 미래에 대비한 새로운 투자 여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 때문에라도 대학 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는 사립대학이 자체적으로 등록금을 감감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적절한 지원과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등록금 감감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대학 발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누구보다 먼저 미래의 우리 사회와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갈수록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반값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공평하게 지원과 성장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대책과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며, 이는 정부와 사회 그리고 대학이 다 함께 노력해야 할 사안이다. 먼저 정부 차원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사립대학에 대해서도 국·공립대학 수준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러한 지원은 증세를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정부 재정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방 예산에다 갈수록 늘어나는 복지 예산까지 고려한다면 국가 예산을 통한 사립대학 지원에는 별도의 세수 확보가 뒤따를 수 밖에 없다. 이는 물론 대다수 국민들의 합의가 전제될 때 가능한 일이다.

아울러 사립대학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의 확대와 더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과 학부모의 가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

여 현재 시행 중인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제도도 현재보다 훨씬 장기 저리로 학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국가로부터의 지원은 일정 수준 한계가 있으므로 사립대학도 나름의 지구책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저출산으로 인해 대학진학 적령기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현상은 반값등록금 문제와 별개로 향후 대학 운영에 직접적인 어려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등록금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사립대학 스스로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예컨대 기부금 증대, 수익다각화, 운영비용 절감 등 여러 가지 지구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선 동문이나 기업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기부금 수입의 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하겠다. 그리고 산학협력을 통한 연구비 수입 증진, 연구결과의 지적재산화를 통한 수입 증대, 적립금의 투자 수익 등 각종 수익다변화 정책의 도입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건비 절감과 예산 절감을 위하여 효율적인 행정시스템의 도입과 그린캠퍼스 사업을 통한 에너지 절약 등 대학운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부문화가 잘 조성되어 있는 선진국의 경우 많은 사립대학들이 기부금으로 대학 운영의 상당 부분을 감당하고 있다. 우리 사회도 부유층과 지도층을 중심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기부문화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하며, 기부자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 등 필요한 제도 개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대학도 마찬가지다. 기부문화의 활성화가 곧 대학의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여러 제도 개발에 앞장서서 노력해야 하며, 기부자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이처럼 우리 모두가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대승적인 공감대가 먼저 형성되어야 하며, 아울러 대학과 정부와 사회가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시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중앙고등학교, 명지대학교 무역학과, 美 Long Island University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일본 교토대학교 대학원 경제학부에서 경제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명지대학교 부총장, 관동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국제대학교스포츠포럼(FISU)국제조정위원회(CO)위원, 명지대학교 총장,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위원,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 집행위 부위원장, 경기도그린캠퍼스협의회 회장, 대한대학교스포츠포럼위원회(KUSF) 위원장, 한국대학교스포츠포럼협의회(KUSF) 부회장, 국민생활체육회 고문, 한국대학기상교육연합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문교부장관표창, 체육훈장 맹호장, 환경부장관 공로상 등을 수상하였다.